

다산포럼



이 중 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으로 무려 낙 달을 넘게 끌어온 이번 탄핵정국이 마침내 어렵사리 종결된다 싶었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며칠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뚱맞게도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두 분 재판관의 후임을 기습적으로 지명하면서 내란국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이가 바로 한 총리 자신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입장을 180도 바꾼다.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직의 사고(事故)와 궐위(闕位)가 다르며 파면과 함께 이제는 대통령직이 궐위가 되었으니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며 편을 든다. 과연 그럴까. 마치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 노릇’하는 꼴이다.

NGO 칼럼



정 성 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연다. 그러나 정작 이 날, 수많은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온다. 기념이 아닌 절규의 현장이다. 왜일까? 장애인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은 아직 이 사회가 얼마나 멀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른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0명 중 7명은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용, 교육, 이동권에서의 차별이 두드러졌다. 표면적으로 법과 제도가 생겼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인사 지원에서 탈락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건물 하나 들어서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많이 없어졌지만 장애로 인한 차별은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1%에 불과했다. 일반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취업한 장애인 중 다수는 임시직·

권한대행은 두 달짜리 대통령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대통령제에는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따로 있다. 대통령직에 궐위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정해져있다. 선거에서 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 동반 당선되었기에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다. 즉 기간 미국의 헌정에서 여러 번 있었듯이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가능성을 미리 전제하고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하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대통령직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권한대행은 어떤 일을 해야 마땅하겠는가. 권력의 공백기인 중재대한 시기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는 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늦어도 두 달 후면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불가역적인, 즉 되돌릴 수 없는 국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이번처럼 대통령 몫인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따라서 현상유지적이고 소극적인 권한 행사가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직을 잠칭하는 셈이 된다. ‘잠칭(僭稱)’은 다소 생경한 말인데 국어사전에는 “분수에 맞지 않게 스스로 황제나 왕이라고 일컬음”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대선 관리가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업인 궐위에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의 차기 대선 출마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87세를 일기로 1934년에 사망했다. 바로 그 전 해에 힌덴부르크가 수상으로 임명한 히틀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은 채로 혼자서 수상직과 대통령직을 겸했고 이후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서 ‘지도자이자 수상’, 즉 총통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가졌다. 대통령직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일민족의 구세주라면서 기독교의 구세주(救世主)를 참칭했다. 주지하듯이 이에 뒤따르는 비극은 비단 그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다.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는 총리에 대한 의회 다수의 불신임과 함께 내각 전체가 총사퇴한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함께 국무총리 등 각부 장관들도 사실상 함께 면직된 셈이다. 파면 당하기까지에 이르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및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보좌를 그르친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가 않다.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또한 함께 져야 마땅하다.

하물며 이러할진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스스로 두 달짜리 대통령으로 행세하면서 원권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태는 대통령제의 본질과 정치적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장애인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단기직에 머물며 평균임금은 비장애인의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노동의 현실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는 여전히 ‘고용 기피 대상’으로 장애인을 취급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약 65%에 그친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를 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서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눈치’를 봐야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장애인 품택시 배차 평균 대기 시간은 약 70분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심지어 2시간이 넘는 곳도 존재한다. 광주도 예외없이 밖으로 나가 기위해서는 외출 몇시간 전부터 동선을 체크해야 하고 이동편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고립’이며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정부는 2021년,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생활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소수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보야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폭력은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이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인권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사회가 인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평등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공식화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구별, 1등과 꼴등의 구별로 대변되는 계급사회로의 회귀로 이어질 수 있다.

탈시설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가치중대를 불리고 무형적 가치를 넘어 생활시설에서 소비하고 있는 재화를 장애인 각각이 지역사회에서 소비하기에 경제적 활성화(지역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로 증명된 바 있다.

탈시설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가치중대를 불리고 무형적 가치를 넘어 생활시설에서 소비하고 있는 재화를 장애인 각각이 지역사회에서 소비하기에 경제적 활성화(지역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로 증명된 바 있다.

장애인은 기념일에만 기억하는 대상이 아니라 매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휠체어를 끌고 거리로 나온다. 시위를 하고, 삭발을 하고, 철로 위에 눕는다. 왜?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4월 20일,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함께 살아갈 사회를 약속해야 한다. 장애인은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존재다. 누구나 언제든 장애인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는 그 누구도 소외해선 안 된다는 상식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한다.

‘폭삭 속았수다’ ...당직, 이제는 AI로

정 시장이었다. 민선 8기 들어 시장이 매일 아침 출근 길에 당직실을 방문해 민원사항을 확인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직제도에 의문점이 든 것이 첫 시작이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당직실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분석해 보니 2023년 기준으로 접수된 당직 민원은 총 1592건으로 이 중에 약 86%인 1376건이 대중교통 안내, 일반민원 접수 등 단순 민원이었다. 또한 당직근무로 직원들의 직장·가정의 불균형, 당직근무 후 휴무로 인한 민원처리 공백 등의 문제도 조직 내에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광주시의 선택은 당직을 폐지하고 AI 선도도시답게 AI당직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지난해 8월 당직 기능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통합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와 협업해 AI당직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중교통 민원, 분실물 신고 등 일반 민원들을 AI가 자동으로 접수했고 자치구, 상수도본부, 종합건설본부 등 기관별 처리해야 할 민원은 소관 당직기관으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까지 추가했다.

AI당직시스템 도입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AI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똑똑했다. 당직제 폐지 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당직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9853건의 민원 전화 중 84%인 8272건을 AI가 처리했다. 직원이 직접 받은 유선통화 건수는 1581건으로, 시스템 도입 이전보다 60% 감소했고 이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존에는 월평균 122명의 당직근무자가 일직·속직 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전담인력 배치로 시민들에게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AI당직시스템은 매 분기별 디라닝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만큼 든든한 동료가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도 꽤나 높다. 직원들은 더이상 당직근무일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체자를 구하러 전전공공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과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저연차 직원들은 당직근무에 따른 자녀들의 등교, 등원, 병원 진료 등의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시민의 편의는 높이고 행정의 업무 효율까지 높인 당직폐지와 AI당직시스템 도입은 민선 8기 광주시의 대표적인 행정혁신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부산, 대구, 제주, 충북, 충남 등 30여개 자치단체들이 광주시를 벤치마킹하러 왔거나 자료 요구 등을 했었다. 광주의 정책이 전국 대표 표준 정책으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나아가 광주시는 이와 같은 행정혁신 사례를 중앙부처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社說

참가 기준도 없는 드론대회 ‘총체적 부실’

기능경기대회의 한 종목인 드론 대회 운영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 자치단체가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매년 기능경기대회를 열고 있는데 드론 대회에서 무자격 참가자가 입상하는가 하면 무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대회 도중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는 오락가락 운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광주공고에서 열린 ‘산업용 드론 제어’ 대회 참가 10개 팀 가운데 4개 팀이 경기 중 제외됐다. 대회 운영측인 산업인력공단 광주기능경기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의 ‘무자격자는 대회 참가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데 따라 탈락시킨 것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기능경기대회에 사용되는 드론은 기체중량 16kg, 이륙중량 24kg으로 드론을 운용할 경우 2종 조종장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회 운영측이 개최 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모집 공고를 내 빚어진 일이다.

행당한 일은 산업용 드론 제어 종목이 도입된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회 운영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 는 것이다. 광주일보의 취재로 불법이 확인되자 광주기능대회측은 면허증 없이 참가한 팀을 탈락시켰지만 전남도 등 타 지역에서 무자격자가 상을 받아 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가 자격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런 드론 대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회 운영측인 산업인력공단과 관리부처인 국토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산업인력공단은 5년 전 첫 대회를 치르기에 앞서 국토부에 질의해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드론의 활용도와 중요도는 갈수록 커지는데 기준조차 없이 대회를 개최하는 정부 기관과 산하단체, 지자체라니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기후로 일상이 된 농작물 냉해 ‘시름’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냉해 등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봄철 일조량 부족과 이상 저온으로 개화기 과수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월 고온, 4월 저온’ 등 봄철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저온으로 인한 전남 지역 농작물 피해한 4만 3529ha에 달한다. 최근 4년간은 피해가 더 커져 2021년 3209ha이던 저온 피해 규모가 2023년에는 두 배가 넘는 7127ha로 급증했다. 올해도 3월말부터 평년보다 2~6도 낮은 저온현상이 지속되자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냉해 피해가 늘고 있다. 피해를 입는 작목은 주로 배와 멜론, 참두릅이다. 나주 배 농가에선 꽃이 피기 전에 냉해 피해를 한 번 입은 상황에서 다시 추위가 찾아와 급하게 수분 작업을 마쳤지만 착과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꽃봉오리 껍질이 벌어진 시점에 기온이 떨어

져 꽃이 피기 전에 씨방이 쉽게 고사하는 곳도 늘었다고 한다.

하우스로 재배하는 멜론은 냉해 피해가 없을 것 같지만 일조량 부족으로 특유의 ‘그물 무늬’가 안 생기고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보성에선 최근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참두릅 농가 50여곳이 냉해 피해를 봤다. 참두릅은 수확 시기가 빠르고 생육 초기 저온에 민감한 작물인데 최근 봄 추위로 두릅 순이 얼어 출하를 못하게 됐다.

냉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예방 및 사후 대책은 미흡하다. 예방을 위해선 다양한 재배 예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열악한 농가 입장에서 투자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도 낮고 보상액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농작물재해보험이라도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과중한 할증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광주 서구 서창 치안센터 맞은편에는 작은 비석 3기가 나란히 서 있다. 주민들이 세운 ‘농선대시주비’(農船大施主碑)와 ‘박호련시혜불망비’(朴浩連施惠不忘碑) 2기이다. 3개의 비석 모두 서창나루와 극락강 건너 들녘을 오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나룻배(農船), ‘나눔 실천 활동’과 연관된 이야기를 품고 있다.

‘농선대시주비’는 1769년 서창주민들이 농선을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한 한량 강선주와 통정 조창자의 선행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때 서일중(금액 3량)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나룻배를 만들기 위해 십

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감독 김현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김장하(81) 선생의 삶과 철학을 조명하는 영화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을 다시 보며 긴 안목에서 인재를 키운 김장하 선생의 큰 뜻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물로 김장하 선생을 꼽으며 “제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수다”라고 답한다. 다큐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강을 건너야하는 농민들을 위해 나룻배를 마련해주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쌀을 건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는 이들... 결코 평범하지 않게 나눔실천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돌게 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아름다운 사람



황 인 채
광주시 총무과장

‘폭삭 속았수다’는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내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드라마다. 드라마 제목 ‘폭삭 속았수다’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이 야간 민원처리를 위해 근무하던 당직제도에 ‘폭삭 속았수다’며 뜨거운 안녕을 고했다.

필자의 첫 당직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사무소로 첫 발령이 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당직근무를 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한밤중에 느꼈던 생경한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는 왜 당직을 하는지도 몰랐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어느덧 35년이 지난 지금, 까마득한 시절부터 운영됐던 당직을 특·광역시 최초로 폐지하고 보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광주시가 당직을 폐지하게 된 시발점은 장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